

1. 추가협약의 결과, 국민적 요구와는 다른 길 선택해...

- 한·미 양측은 1주일간 7차례에 걸친 쇠고기 추가협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도출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4개 부위 수입 차단 ▲국내 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합의사항 명시 등을 한·미 추가협약의 결과물로 제시했다.
- 정부의 자신에 찬 발표와는 다르게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먼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미 정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출’을 보증하던 수출증명(EV) 시스템에서도 이미 수백여 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민간 수출업체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QSA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위반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또한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없는 4개 부위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미국과의 추가협약의 성과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막창·대창 등 내장도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거되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 600곳이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갖게 됐지만 이들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를 해도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조치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한 없는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 조치’ 즉 단기간 적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합의문 해석이 상반적이다.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라고 문구 또한 애매모호하다. 국민이 신뢰한다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 결국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전제 없이 쇠고기의 월령만 논의함으로써 국민과의 눈높이 수준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소 주춤했던 촛불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땀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설득할 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시 강행을 국민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검역주권 확보,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2. 폭등하는 원료·기자재, 정부와 농협의 역할 중요

- 연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농민의 영농비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생계수단의 상승비로 나타난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 6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가 화학비료 가격 24%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 사용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를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 화학비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가격이 60%가량 인상된 가운데 정부와 농협, 업계 분담금 지원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국제 비료원료가격의 급등으로 화학비료가격이 60%이상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화학비료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책 302억원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추가부담예산액 1005억원 중에서 정부가 30%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 참고 : 인상비율 = 농민, 정부, 농협, 비료업계 : 3, 3, 3, 1
- 그러나 정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63%에 이르는 인상분 전체가 고스란히 농민부담으로 전환된다. 인상비율의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할 인상비율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부와 농협이 인상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이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비료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대비한 농자재가격안정기금 등을 마련하고 화학비료 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농가가 어렵다는 점은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점을 인지하고 정부와 농협은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